

한국경제 여건과 2015년 정책방향

주 형 환 (기획재정부 1차관)

1. 들어가는 말

지난 2년간 우리경제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 2%대로 하락했던 성장률이 2년 연속 개선되어 지난해에는 3.3%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5년을 시작한 한국경제는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면서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가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잡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부문 간 격차 문제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 등 후발국들의 추격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는 경제를 지속 회복시키면서 구조개혁도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진단하고,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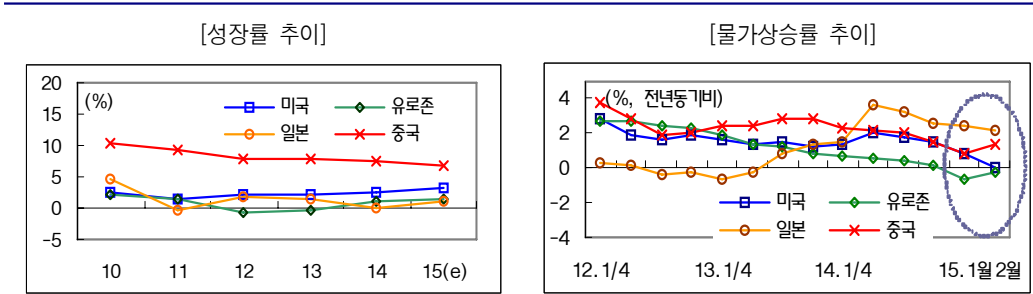
2.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1) 대외 여건

세계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국가별 성장세의 차이가 심화되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본과 유로존은 '14년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다. 그동안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중국도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투자 감소,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올해 7% 이상 성장이 불투명하다. 특히 올해 들어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도 0%대로 둔화되고 있어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을 및 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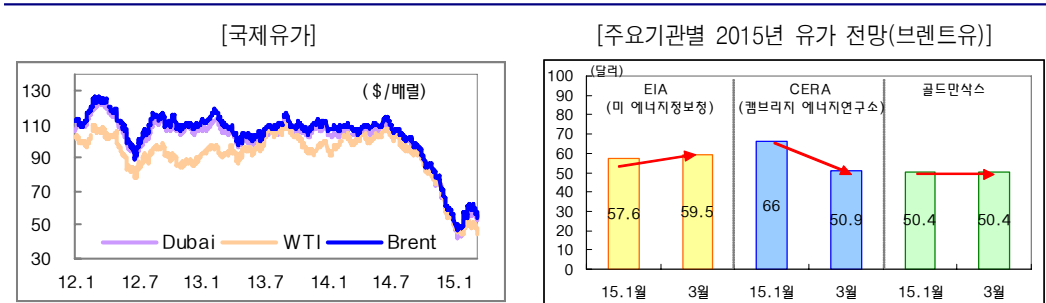


자료: IMF WEO('15.4월).

자료: 美 상무부, Euro Stat, 日 총무성, 中 국가통계국.

우리나라 역시 작년 12월부터 물가상승률이 0%대에 진입하는 등 저물가가 심화되고 있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저물가는 수요측 부진보다는 공급측 요인인 국제유가 하락에 주로 기인하고 있어 디플레이션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유가하락은 수입물가 하락 등에 따른 가계 실질구매력 증가, 중간재 비용 하락에 따른 기업 수익성 증가 등의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MF도 유가하락이 러시아 등 산유국 경제에는 부정적 요인이지만, 세계경제 성장률을 0.3~0.7%p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세계경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주요 기관별로 유가 전망이 엇갈리는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그 효과가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림 2> 국제유가 추이 및 주요기관별 유가 전망



자료: 한국석유공사 petro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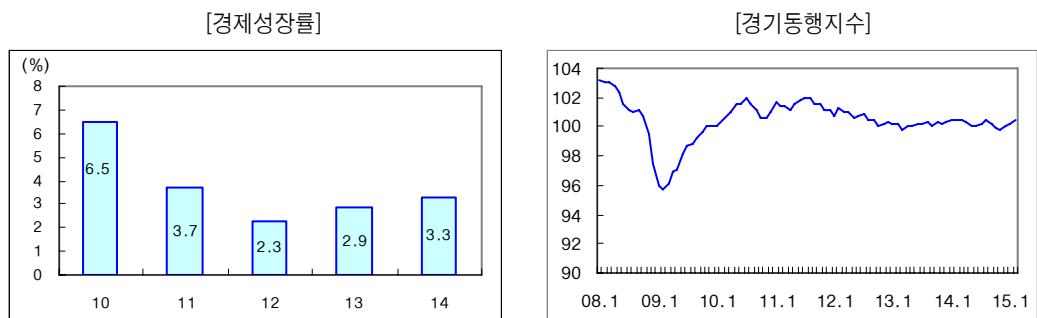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은 올해 세계경제의 핵심 도전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 Fed가 3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는 가이드스를 삭제함으로써 금리인상 가능성을 보다 분명히 했지만 물가상승률 둔화,¹⁾ 달러강세 등의 요인으로 향후 금리인상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본과 유로존은 양적완화를 지속하는 등 주요국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질서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흥국의 급격한 자본유출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는 실물경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에 처음으로 대외부채보다 대외자산이 많은 순자산국으로 전환하는 등 양호한 대외건전성으로 인해 여타 신흥국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자본유출입이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대내 여건

이처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경제의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한 상황이다. 2012년 2%대로 하락했던 성장률이 2년 연속 개선되어 지난해에는 3.3%를 기록했지만 잠재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림 3> 우리나라 성장률 및 경기동행지수 추이



자료: 한은 국민계정.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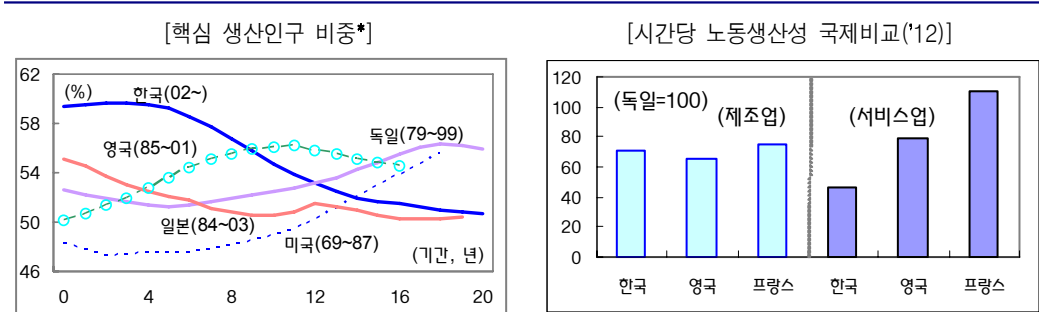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단순히 경기순환적 요인 뿐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어 잠재성장률 자체의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생산가능인구가 둔화되는 가운데 노동생산성 제고도 미흡하여 양적·질적 성장 모두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독일·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1인당 GDP가 2~3만달러 기간에 생산

1) Fed는 3월 FOMC에서 금리인상 시기와 관련, 고용시장이 좀 더 개선되고 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 2% 목표치를 향해 간다는 합리적 확신(reasonably confident)이 설 때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힘.

가능인구 중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핵심 생산인구(25~49세) 비중이 상승하며 성장에 기여했던 반면, 한국의 경우 핵심 생산인구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노동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도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야 할 서비스업은 영세성 지속, 각종 규제 등에 따른 고부가가치 업종의 성장 부진 등으로 생산성이 여타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림 4> 핵심 생산인구 및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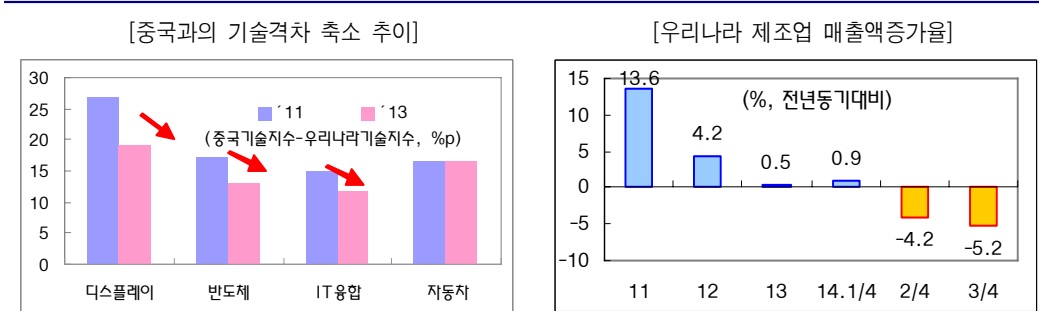
자료: OECD.

자료: 한국 생산성본부.

주: * 1인당 실질GDP 2~3만\$ 기간 핵심생산인구/생산가능인구.

후발국들의 거센 추격 등으로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엄청난 속도의 기술추격을 바탕으로 우리 주력제품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고 있어 우리 제조업 등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그림 5>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및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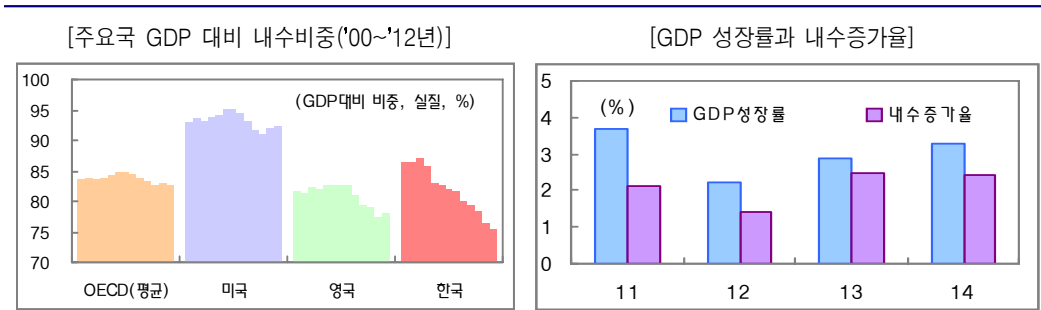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가계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등 부문간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확대되고 내수부진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회복에 비하여 체감경기 개선이 더디고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중소기업→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경제 전반의 역동성도 저해되고 있다. 부문간 불균형이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6〉 우리나라 내수부진 현황



자료: OECD.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3. 대응방향

정부는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를 올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으로 경기회복 노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내수회복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로 구조개혁의 기초체력을 길러주는 선순환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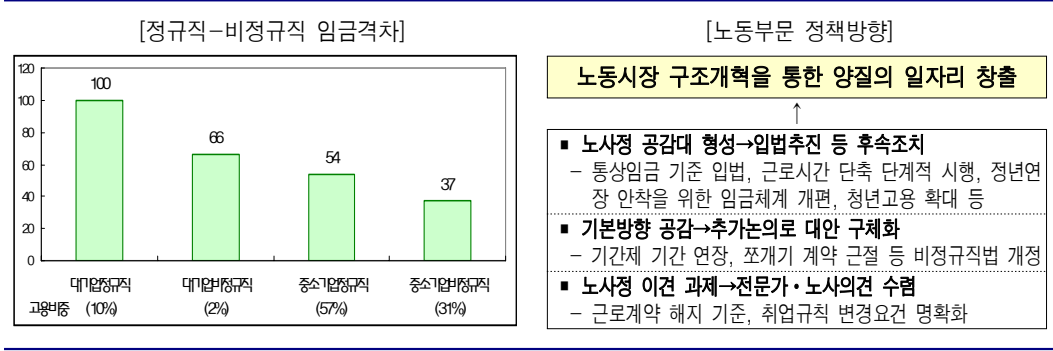
1) 구조개혁

우리경제는 98년 외환위기 이래로 근 15년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 결과 경제 각 부문에 비효율과 적폐가 겹겹이 쌓이고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작년 2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였고 강력한 추진을 통해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올해는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 부문에 구조개혁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제혁신의 성과를 본격화하고자 한다. 4대 부문은 경제를 지탱하는 양 축인 사람(노동·교육), 돈(금융·공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개혁의 최우선순위가 아닐 수 없다.

먼저 노동부문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고용보호 격차, 불합리한 차별 등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생산성이 둔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고 있어 그 어느 부문보다 개혁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진행된 노사정 협의결과를 토대로 노동시장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등은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기본방향에 공감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한 비정규직법 개정 등은 사안별로 적절한 회의체를 통해 후속 논의를 거쳐 대안을 구체화해 나가려 한다. 한편, 마지막까지 합의하지 못했던 취업규칙 변경요건 명확화 등의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림 7> 노동부분 현황 및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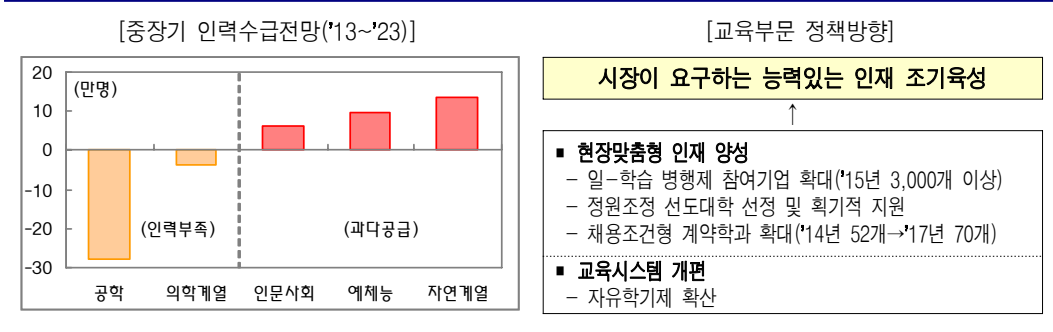


자료: KDI.

자료: 기획재정부.

교육부문의 경우 교육이 현장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지 못함에 따라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있는 인재의 조기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학생·고교졸업자·대기업 등의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계 수요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종전보다 3~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시스템 측면에서도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확산해나가려 한다.

<그림 8> 교육부분 현황 및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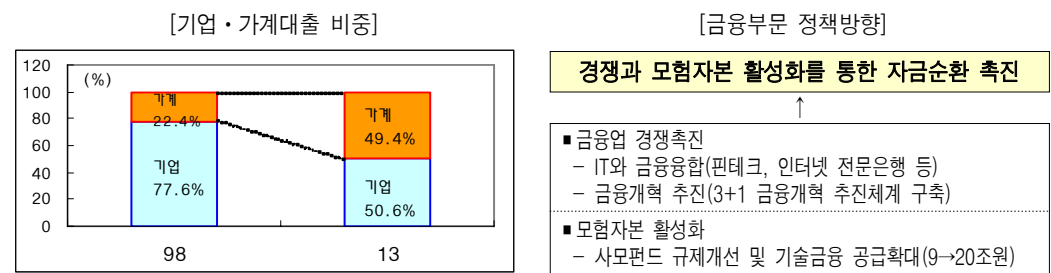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자료: 기획재정부.

금융부문은 소극적인 대출·투자행태 등 금융산업의 보신주의로 금융이 실물경제 회복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의 역동성을 제고하여 실물경제로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등 IT와 금융의 융합을 본격화하는 한편, 최근 구축을 완료한 3+1 금융개혁 추진체계²⁾를 중심으로 자율과 경쟁의 원칙 하에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하여 큰 틀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사모펀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술금융공급을 9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모험자본 활성화로 역동적인 금융생태계를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그림 9> 금융부문 현황 및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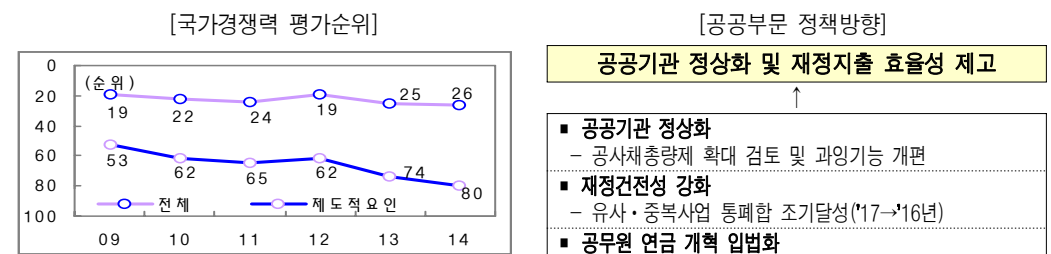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자료: 기획재정부.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은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비효율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을 통해 공사채총량제 확대 등 부채감축을 제도화할 것이다. 600건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계획 달성시기를 '17년에서 '16년으로 앞당기는 등 재정개혁도 가속화한다. 더불어 공무원 연금 개혁의 입법화를 위해서도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그림 10> 공공부문 현황 및 정책방향



자료: WEF.

자료: 기획재정부.

2) 금융개혁회의(민간 고위 심의기구), 금융개혁 추진단(정부 협업 추진기구), 금융개혁 전담조직(금융위·금감원 합동 상설조직) + 금융개혁 자문단(민간 연구자문).

2) 경제활성화

구조개혁의 기초체력 제공을 위한 경제활성화는 크게 확장적 거시정책, 소비·투자여건 개선,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를 핵심 축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거시정책을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미 '15년 예산을 전년대비 20조원 대폭 증액하였으며, 이 중 59%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 등 '6조원+a'정책패키지의 잔여분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이다. 한국은행도 '14년 중 금리를 0.5%p 인하한 데 이어 올해 3월 0.25%를 추가 인하하는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회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과 미국의 거시정책 사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이유 중 하나가 거시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이다.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총수요 위축을 심화시키고 다시 세수감소 등 정책여력을 소진시키는 '소심함의 함정'(timidity trap)에 빠졌던 것이다. 반면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였지만 전례없이 과감한 양적완화 정책 등을 통해 자국경제의 회복을 이끌어냈다.

내수의 양대 축인 소비와 투자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과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연금 보장성 확대를 통해 노후생활의 불확실성도 완화해나갈 것이다. 투자의 경우 기존의 대출방식에서 벗어나 지분투자 등 투자리스크 분담 방식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해나가는 한편, 연구자·수요자 중심, 성과와 질 중심의 범부처 R&D 혁신방안을 5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기요틴을 통한 규제 일괄개선, 지역균형 발전의 틀 안에서의 수도권 규제완화 연내 해결 등 규제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관광·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 노력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다.

민간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여 주거안정과 투자를 동시에 촉진할 것이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제도권 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임대주택시장 육성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용지공급을 대폭 확충하고, 취득세·소득세·법인세를 중심으로 획기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임대주택사업 단계별로 종합지원을 해 나감으로써 올해 1만호 수준을 공급하고 향후 임대주택공급 대폭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경제의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최근 34조원 수준의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대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시행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거시건전성 체계를 점검하고, G20 등 주요국간 국제공조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그림 11> '15년 경제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확장적 거시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예산을 전년대비 20조원 증액(375.4조원)하고 상반기 59% 조기집행 · '14년~'15.1분기 중 금리 총 0.75%p 既 인하(2.5%→1.75%)
소비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본격 시행 및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15년 7.1%) · 주택연금+의료비보장보험 연계 등 연금보장 강화 · 연금금 주주권 강화를 통한 배당 확대
투자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리스크 분담방식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30조원 이상 신규투자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대상: 신성장산업, 전통주력산업, SOC·인프라투자 중심 / 투자방식: 대출보다는 지분투자 방식 · 임무+연구자, 성과 및 질, 수요자(시장) 중심의 R&D 혁신방안 마련(5월) · 규제비용총량제·규제기요틴 추진 · 지역균형 관점을 고려한 수도권 규제완화 연내 추진 · 관광·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사업 단계별 종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조성·공급)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설 - (건설·매입) 주택기금 출자·대출조건 완화, 장기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25→50%) - (운영·출구) 리츠 법인세 면제기간 확대(5→8년), 소득세 감면 확대 · 기업형 임대주택관리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청소 등 종합주거서비스 제공, LH 임대주택운영업무 민간 개방 · '민간임대주택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인프라 구축
리스크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채 구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안심전환대출, 34조원) * (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 / (만기) 10~30년 이내 / (혜택)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이자비용 소득공제 ·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재무안정 PEF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지원방안 마련 - 기업이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시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샷법 제정 · 자본유출입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건전성 제도 개편, G20, ASEAN+3(올해 공동의장국) 등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4. 맺음말

2015년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우리경제에 겹겹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들이 조금씩 민낯을 드러내면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세계 주요국들도 경쟁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

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분야 구조개혁은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노동과 교육개혁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현재의 우리 경제는 이전 세대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는 미래세대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현 세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조금씩 양보하여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작년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G20 회원국의 성장전략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방향은 제대로 잡은 셈이다. 정부는 2015년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하는 한 해, 이를 통해 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한 해로 만들 것이다. 핵심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의 두 마리 사자를 모두 잡아 4%의 성장능력, 70% 고용률, 국민소득 4만달러로 가는 여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